# 요 약

-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한 후,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 내수 부진으로 2023년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명에서 2024년 24만명, 2025년 17만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

# 1.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
  -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다만, 월 단위로 집계되는 산업생산 지표가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 하면, 1/4분기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내수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친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사물량의 일시적 집중
    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 반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교역량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
  -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모습

- 내수 부진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완만하게 축소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가 2023년에 이어 2024~25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경기의 상승세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수출 여건이 지속될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은 2024년에 크게 반등한 뒤, 202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도 우리 경제의 단기적 위험을 축소
    시키는 요인
  -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실질구매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 이와 같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향후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점차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도체경기도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 하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내수는 시차를 두고 파급되어 온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희석되고 수출 물량과 가격 회복 등에 따라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
  - 작년부터 나타난 내수 부진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불가피한 결과였던 측면이 있으며, 그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세가 뚜렷하게 안정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더욱 안정될 전망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판단
  - 재정정책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대되었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 (GDP 대비 3% 이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 II. 2024~25년 국내경제 전망

####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 2024~25년 세계경제는 2023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제
  - 최근 IMF는 지정학적 불안 등의 경기 하방 위험에도 불구하고, 2024~25년 세계경제가 2023년과 동일한 3.2%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1~19년)의 평균(3.5%)보다는 낮은 수준임.
-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2024년에는 2023년(배럴당 81 달러)보다 높은 85달러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82달러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

#### 2. 2024~25년 국내경제 전망

-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한 후, 2025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
  - 2024년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2023년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8% 증가하는 데 그친 후, 2025년에는 부진이 완화되면서 1.9%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는 2024년에 반도체경기 상승으로 2023년(0.5%)보다 높은 2.2% 증가한 후, 2025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3.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2023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4%, 1.1% 감소할 전망
  -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도 개선 되면서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2023년(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한 후, 2025년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과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근원물가 상승률도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2023년 3.4%에서 2024년 2.3%, 2025년 2.0%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반영되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3년 33만명에서 2024년 24만명, 2025년 17만명으로 점차 축소될 전망
  - 실업률은 2024년 2.8%, 2025년 2.7%로 2023년(2.7%)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3. 전망의 위험요인

-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거나 중국의 부동산경기 부진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중동 지역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구매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중국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
  - 아울러 2024년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2024~25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만명)

	2022 <sup>p</sup>	2023 <sup>p</sup>	2024			6, 역달러, 반영) 2025
	연간 <sup>p</sup>	연간 <sup>p</su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2.6	1.4	2.9	2.3	2.6	2.1
총소비	4.1	1.7	1.1	2.2	1.7	2.0
민간소비	4.1	1.8	1.4	2.2	1.8	1.9
총고정투자	-0.5	1.1	0.2	0.7	0.5	1.0
설비투자	-0.9	0.5	0.7	3.6	2.2	3.1
건설투자	-2.8	1.3	-1.1	-1.7	-1.4	-1.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1.6	2.4	2.5	2.4	2.9
총수출(물량)	3.4	3.1	7.4	4.0	5.6	2.4
상품수출(물량)	3.6	3.1	6.7	4.0	5.3	2.3
총수입(물량)	3.5	3.1	1.4	4.4	2.9	2.1
상품수입(물량)	4.3	-0.6	-1.2	4.9	1.9	2.1
경상수지	258	355	357	346	703	778
상품수지	156	341	371	378	749	821
수출(금액)	6,943	6,450	3,415	3,620	7,034	7,198
(증가율)	6.9	-7.1	9.5	8.6	9.1	2.3
수입(금액)	6,787	6,110	3,044	3,242	6,285	6,376
(증기율)	18.3	-10.0	-3.4	9.6	2.9	1.4
서비스수지,	102	14	-14	-32	-46	-43
본원・이전소득수지						
소비자물가	5.1	3.6	3.0	2.3	2.6	2.1
근원물가	3.6	3.4	2.4	2.2	2.3	2.0
취업자 수(증감)	82	33	26	22	24	17
실업률	2.9	2.7	3.2	2.5	2.8	2.7
(계절조정)			2.8	2.8		

주: p는 잠정치임.

## Ⅲ. 정책방향

## 1. 재정정책

- 향후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점차 축소해 나가며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할 필요
  -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축소됨.
  -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는바, 재정준칙 도입 이전이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세입 확충과 총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 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
  - 경기침체 등 유사시 재정이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 통화정책

-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수렴해가는 속도에 맞추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갈 필요
  - 기조적 물가상승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안정목표 (2%)에 근접한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긴축 기조의 점진적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중기적 시계의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농산물, 석유류 등 변동성이 높은 품목의 일시적 물가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낮음.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물가와 경기 흐름을 감안하여 운용될 필요
  - 미국, 유로존 등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용
  -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경제 여건이 다른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정책 기조에 동조화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운용할 필요

#### 3. 금융정책

- **현재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제주체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운용할 필요
  -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금융
    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업권의 부
    동산PF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은 상존함.
  - 부실 기업 및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산 정리를 통한 재무 정상화 등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할 필요
- **차주 단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본연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하지 않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산정 시 향후 소득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 대출 상환 이력 등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약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음에 유의